

10 오피니언

사설

가수 공연이 주가 되는 대동제

대학 축제가 '대동제(帶同祭)'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축제를 통해 '생산자(총학생회와 각 문화동아리)와 향유자(학생)'가 하나 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올해를 포함해 요 몇 년간 진행된 축제를 보면 대동제의 본래 의미는 바래지는 듯하다.

대학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대동제는 누가 더 유명한 가수를 섭외해 오는지의 경쟁장으로 변했다. 대학은 더 이상 문화의 '창조자'가 아닌 대중문화의 '소비자'가 됐다.

1956년 열린 '경희대학교 대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행된 대학 축제다. 대학제를 당시 대학주보 지면으로 살펴보면, 행사의 성패는 '대다수의 의견 반영, 전원의 능동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대학 문화를 이끄는 대동제는 구성원의 창의와 노력에 의해 계획되고 실현되면서 그 참된 의미가 발현된다.

가수 공연이 축제의 활기를 더 해준다는 의견도 있다. 좀 더 많은 학생 대중을 축제의 장으로 모이게 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수 공연이 메인 행사화 되고 '그것만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는 말 그대로 '주인'이 되어 버린 현실은 아쉽다. 가수 섭외비 규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대학별로 경쟁적으로 모여 가려 하니 자연스럽게 가수의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당 금액이 교비로 충당되는 대동제 예산에서도 이미 절반 이상이 섭외비라는 점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명 가수 공연으로 주객전도된 대동제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수 공연 시, 공연을 좋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학내 구성원에게만 허락된 자리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외부인에게 10만 원 내외를 받고 대여해주고

있었다.

설국버스를 사재기해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로 수업을 위해 설국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총무팀에 확인해봤을 때 총학의 축제 기간 설국버스 증차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수 공연을 보기 위한 '대리 줄 서기'로 발생한 싸움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전임 학생회 관계자는 "총학도 공약을 결코 나오는 사람들인데 학생들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는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총학이 학내 교육과 복지 그리고 생활에서의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보다는 역량의 많은 부분을 대동제, 그중에서도 인기 가수 섭외에 투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캠퍼스는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 학문의 장이며 그것이 제1

목적이 되는 공간이다. 외부인과 구성원이 뒤섞여 인기 가수 공연을 보기 위해 밤새 텐트를 치며 대기하는 모습과 미술대학까지 줄이 이어진 모습이 본래 대동제가 기대한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교수, 학생, 직원이 공존하는 캠퍼스를 대중가요 공연장으로 만드는 풍경으로 만든 것 또한 아쉽다.

그렇다고 가수 공연 그자체가 악마화될 일은 아니다. 다만 몇 명이나 정상급 가수를 데려왔는지 대동제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동제의 진정한 목적, 수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실험적인 문화적 시도가 주인이 되고 또 그것이 대학과 학생사회를 움직이는 원천이 되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올 가을부터 가수의 공연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대동제를 기대해본다.

세시봉

주인의 자격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지난주 국제법 수업에서 국가 주권 분쟁 관련 내용이 대두됐다. 자연스르게 독도가 떠올랐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국제관계 속에서 바라본 독도는 '분쟁화'에 휩쓸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섬이다.

한국은 독도 분쟁화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독도 영유권에는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당사국 동의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분쟁화해 ICJ(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 한다. 독도 분쟁화는 일본이 바라는 그림이다. 독도를 분쟁의 영토로 만들면 국제사회는 ICJ 제소를 꺼리는 한국의 주장보다 사건을 ICJ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주장에 주목하게 된다.

문제는 ICJ 회부 시, 한국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영토 분쟁에선 '논쟁 없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실효 지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하다. 논쟁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독도를 끊임없이 분쟁화한다. '논쟁 없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실효 점유 여부는 ICJ 재판관이 판단하게 된다. 일본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남기는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해 왔다. ICJ 재판관 또한 일본 출신은 있지만 한국 출신은 없다.

우리에게 유리할 것 없는 분쟁화에 자꾸만 휩쓸리는 이유가 어찌면 '준비 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다. 독도는 종종 한국 정치 갈등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독도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싸울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일본의 도발에 맞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축적해 반박 불가능한 논리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국력을 키우고 외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출신 ICJ 재판관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케시마'를 지키기 위한 일본의 노력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임차인으로서 권리 주장을 위해

확인에는 넘침이 없다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학교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상식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 임차인의 무지에 한몫한다는 평가도 있다.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갖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설마 나에게 보증금 떼이는 일이 일어나겠어'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자 또한 무지한 상태로 별생각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습관은 평생 간다. 아무리 단기간 거주하는 집이라 해도 나중에 '내 집'을 계약할 순간에도

이렇게 어영부영 계약을 진행할 것인가.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 보증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나쁠 것이 없다.

회기동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학교 주변에 이른바 '방 쪼개기'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입을 모아 증언한다.

'601-1호'와 같이 특정 호실 뒤에 '-'가 붙는 호실은 방 쪼개기를 한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601호 좌측 호실'과 같이 구체적인 호실명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청정벽력 같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이미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길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평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자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